

해결기미 없는 조선대 '내분' 정점

교육부 "강동완 전 총장 복귀시켜라"

대자협 "9월 차기 총장 선출 방침 확정"

전임 총장 복귀와 차기 총장 선출 문제로 사분오열된 조선대학교 내분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동완 전 총장을 복귀시키라"는 교육부와 강 전 총장 측 입장에 맞서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9월 총장 선출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선거로드맵 작성에 나서 서로 마주보고 돌진하는 소위 '치킨게임'이 정점을 향하는 형국이다.

12일 조선대 법인과 강동완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법인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전 총장 해임은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직위해제된 뒤 올해 3월 총장직에서 해임됐으며,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6월 강 전 총장의 직위해제 무효와 해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두 차례 회신을 통해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즉각 복직이 가능한지"는 강 전 총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이행공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생활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구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인 조선대 법인은 심사위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조선대 법인 측은 "복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행명령은 일종의 행정지도, 행정질차법상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법인 측은 "소청심사위 결정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한 상태고, 강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 가치분 신중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 교원의 자격과 복무, 신분 보장은 공무원인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사립대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 계약으로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법인 이사회가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게 순리"라는 게 법인의 기본입장이다. 법인은 소청심사 결정에 반발해 지

난달 소청심사위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자협과 혁신위는 대자협 4개 단위 중 하나인 교수협의회가 최근 대자협에 복귀하고 의장

직을 다시 맡게 됨에 따라 내부 정비를 통해 9월 중 차기 총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대자협이 정상화됐고 대자협 주도로 직선제를 통해 개교 73주년인 9월29일 이전에 차기 총장을 선출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총장선거 틀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총장 복귀를 통한 명예회복과 학내 질서 확립을 원하는 강 전 총장측과 나락의 골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무장할 것을 원하는 학교법인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될 지, 공멸로 이어질 지 운명의 한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호 기자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제74주년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대구 북구 읍내동 칠곡한양공작아파트에서 열린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동참한 아파트 주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반일운동단체, 한국당 광주시당 앞서 집회

반일 시민운동 단체가 12일 광주를 찾아 "천일 매국 행위를 일삼는 한국당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의 총칼없는 경제침략에 대해 한국당은 '침착한 한일관계' 등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을 두둔하는 매국 정당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로운 고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부터 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잇달아 규탄 발언을 이어갔으며, "천일 친일 매국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자" 제2의 이완용 집단 한국당 해체하라" 일본의 제침 발판 제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자유와 한국을 모독하는 당명은 어울리지 않다. 새로운 당명을 준비했다"면서 자체 제작한 '천일매국당' 현판을 당사 현판

에 걸기 위해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단체들은 10여 분 가량 추가 집회를 이어간 뒤 준비한 현판을 당사 현판을 향해 던진 뒤 물러났다.

이날 집회를 연 2019 반일·반자한당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는 지난 8일 공식 출범 이후, 부산·대구 등지에서 한국당 당사 앞에서 잇달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수원과 서울에서도 한국당 당사 앞 집회를 이어가며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반일집회에 동참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전남 장애인단체 콜택시사업 금품비리 정황

전남의 한 지역 장애인단체가 콜택시 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금품비리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12일 전남 한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장애인단체가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가 A장애인단체에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A장애인단체의 관계자가 콜택시 운전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500만~1000만원을 받았으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장애인단체 관계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택시 운전을 하게 한 뒤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광주서 경찰관 폭행 남성들 잇따라 입건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신질환자 A(46)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15분께 광주 광산구 모 카페에서 1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양극성 장애가 있는 A씨는 같은 날 오전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체포됐으며, 풀려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경찰서는 지난 10일 낮 12시7분께 광산구 운수동 광산경찰서 1층 분관동 현관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B(53)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만취한 B씨는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소란 행위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목살을 잡고 욕설한 C(36)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께 북구 한 안경판매점 앞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경찰관의 목살을 잡은 혐의다.

술에 취한 C씨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자신의 행위를 말리던 경찰관을 위협하며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형택 기자

보이스피싱 절도 30대 대만인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 집에 보관하게 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대만 국적 A(36)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광주 서구·동구 아파트 2곳에 침입, 냉장고·세탁기에 든 27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경찰관 등을 사칭, '계좌가 금융거래 사기에 연루됐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 집에 보관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70~80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찾아오면 만나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피아내 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에게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달,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간 추적을 벌이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A씨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점을 확인,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일당으로부터 또다른 범행 지시를 받아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내리막도로 공사현장 덮쳐 3명 사상

부산의 한 내리막 도로를 내려오던 승용차가 하수관로 공사현장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당한 사고가 났다.

12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6분께 부산 동구의 한 내리막 도로를 내려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하수관로 공사현장 앞에 있던 신호수 A(60)씨를 치었다.

이어 승용차는 공사현장에 세워진 화물차(공사차량)를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현장에 있던 작업인부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에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인부 2명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대 여성 납치 도주극 벌인 40대 남성 검거

20대 여성을 납치해 도주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납치감금 등의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대전 대덕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에서 지인의 딸 B(21)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충북 경찰은 이날 오후 2시7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지산리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헬기와 순찰차로 A씨를 추격한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대전 경찰청은 추격 과정에서 실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무사한 상태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